여야 '4대강·세종시 예산' 양보 못한다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대충돌 예고
12일부터 상임위별 심사, 20일께 예결특위

이번 주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후반부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면서 연말 정국의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20일께부터 예결특위 심의를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4대강 예산 사수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각오다. 내년 4대강 사업비 6조7천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3조5천억원.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8일 "정부 제출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인 만큼 위법·부당사항이 아닌 한 원안을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3조2천억원의 4대강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보장으로 우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 측이 제기하는 '4대강 턴키공사 불법 발주', '예비타당성 조사 미흡' 등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세종시 예산 처리의 경우 당 방침이 유동적이다. 정부가 정책 변경에 따라 예산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 사업 자체가 논란 거리가 많아 향후 정국을 봐가며 당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도 세종시 예산의 대부분이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돼 있어 수정안이 나와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당력을 집중,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의 '악의 축'으로 규정할 정도다. 4대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쏠리면서 복지·교육·지방 SOC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인상, 노인틀니 지원 등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각 상임위에서 강경하게 싸우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우선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하한선을 과거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두배 수준인 1조원 이내로 잡았다.

민주당은 특히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예산의 세부 내역은 빠진 채 소계별 총액으로만 나와있어 지구별, 사업별 예산규모와 산출근거 제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예산심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예산의 경우 과거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중기 재정계획'상의 예산보다 3천300억원 가량 준 6천951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세종시 대책 논의

8일 오후 서울 중구 엠베셔더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확대당직자 간담회에서 정몽준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세종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서 재기 노리는 親盧

국민참여당 15일 창당준비위… 민주와 연대 모색
서울시장 한명숙 부상·광주시장 이병완 출마 검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노 그룹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때 '폐족' 위기에까지 몰렸던 친노 그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

특히, 친노 그룹 신당파가 주도하는 국민참여당은 내년 지방선거 참여는 물론 민주당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상황이며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도 광주시장을 놓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또한,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천시장, 정영두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해시장, 김성환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노원구청장을 노리고 있다. 성북구청장에는 김영배, 오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쟁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참여당 간판으로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광주시장에,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경남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창당준비위 발족을 즈음해 국민참여당에 입당할 예정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장관은 최근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특히, 국민참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호남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외부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분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수도권과 중부권 공천을 둘러싸고 양 측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매개로 실질적인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소비세 배분 재정자립도 고려를"

강운태 의원 법 개정안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은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비세를 각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배분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 배분 방법을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르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각각 100~300%를 부여해 안분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배분액이 집중, 빈익빈 부익부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제출한 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배분될 경우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소 해소되면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간 균형조정이라는 목적에 한층 접근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민주 복당 조기 공론화 되나

노영민 "정기국회 끝나면 가능할 듯"

민주당의 재·보선 연승으로 무소속 정동영 후보의 복당 문제가 조기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가 10·28 재선거 승리 이후 당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과거 내년 지방 선거 이후 복당 방침을 최근 수정했던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의 복당 시기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과거 당 지도부가 '때가 되면'이란 말로 정 의원의 복당 시기를 애매모호하게 말해왔다는 점에서 노 대변인의 발언은 시기를 구체화한 첫 표현이다. 더욱이 노 의원은 "정 대표는 이미 정 의원의 복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복당이) 정 대표의 결단이나 리더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정 대표의 의중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대표와 교감이 있는 후에 나온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 의원의 복당이 연말께 당내 공식기구를 통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론화가 복당을 즉각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현 여야 대치 상황이 한가하게 정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할 여유를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연말 예산 정국 속에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의원의 복당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교동-상도동계
26일 YS 주재 만찬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동교동계-상도동계 만찬 회동이 오는 2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릴 것으로 8일 알려졌다.

YS가 초청한 이날 만찬은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 8월26일 잡혔다가 "상중(喪中) 만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동교동계내 의견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것이다.

양측 핵심 인사들은 이날 "YS가 DJ 서거와 관련 동교동계 옛 비서진 그룹을 위로하는 자리"라며 "양측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합의 의미도 갖게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세종시 TF' 구성… 당정협의 착수

한나라당이 이번 주 '세종시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바로 당정 협의에 착수하는 등 여권이 세종시 축소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초 정몽준 대표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세종시 논의기구를 공식 발족시킨 데 이어 당정 협의를 곧바로 들어갈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내에 발족할 논의 기구는 4선의 정의화 의원을 총책임자로 10여명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구는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여론 수렴, 외국사례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할 뿐 아니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의견을 긴밀히 조율하면서 정부의 수정안 마련에 적극 관여하게 된다.

이와 박자를 맞춰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정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이어 17일께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접촉을 갖고 큰 틀의 세종시 구상에 대해 협의하는 등 당정 협조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의 생각대로 당정의 유기적 협조 속에 세종시 축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 여론이 여권 지도부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권으로서는 당내 갈등이 심화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도 걱정이다.

그렇다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친이(친이명박)계의 입장. 당정은 향후 여론의 흐름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충청도민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객관적, 합리적 자료를 토대로 세종시 수정 내지 축소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